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탄력

‘강호축 개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국가 의제로 추진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 구상이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국토·공간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국가 의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계획이 포함돼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으로 채택됐다.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과 대비되는 강호축 구상은 2014년부터 강원과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세종, 대전, 충남 등 8개 시·도 단체가 협력,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월 8개 광역시장, 도지사가 합의한 강호축 공동건의문에는 제천~삼척고속도로 건설이 명시돼 있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26년까지 강릉~목포를 3시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영동권 물류·관광지 중심 도약

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 국토 균형발전 및 유라시아 교통물류 기반 조성,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영동권이 북한과 중국대륙,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강호축 외에도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

도로 조성, 제주~강원, 부산, 인천 해상물류체계 구축, 환동해권 관광허브 구축 등의 강원도 연관사업이 반영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 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구체화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다”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정부 건설투자 확대’ 전문건설업 수주액 11% 늘어

올 10월 전국 전문건설업 공사수주액 규모가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전문건설업 공사수주액은 총 5조8,720억원으로 전

월에 비해 11.6% 늘었다. 도급형태별로는 원도급공사 수주액이 한 달 새 23.8% 증액된 2조1,640억원, 하도급공사 수주액이 6.4% 많아진 3조7,580억원이었다. 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윤종현기자



◇'2020 강원경제 대진단, 여건과 대응'을 주제로 한 강원포럼이 3일 강원연구원에서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 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허인구 G1 강원민방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2%대 저성장 유지 속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

‘2020 강원경제 대진단’ 포럼

내년 국내 경제는 2%대 저성장을 유지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올해와 비슷한 침체를 겪다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개선되는 ‘상저하중(上低下中)’론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신중하고, 지자체는 지역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7면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3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0 강원경제 대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양옥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내년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아시아 신흥국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기업 대규모 투자 신중해야
가계·기업 체감은 미미할 듯

한국의 반도체 경기는 중국 수요 회복으로 나아질 전망이다. 이어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로 민간 소비도 회복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미흡해 회복 수준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정정책들의 효과 여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성병목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장도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올해(2.0%)보다 높은 점을 인용하며 ‘완만한 개선’을 전망했다. 하지만 가계,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팀장은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더라도 강원도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령층의 소비여력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소비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SOC사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성 팀장은 “포항-삼척 철도 연결, 동해항 3단계 개발, 노후상수도 정비, 도시재생 등 도내 주요 SOC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돼야 건설투자 부진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전망이 어두울수록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이 경제”라며 저성장 국면 속 지역경제 대응력을 강조했다. 신하림기자

“건설·서비스업 위주 경쟁한계 산업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강원경제 대진단 포럼

강원도 지역경제가 국가경기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건설업·서비스업 위주’인 산업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자체의 지역경제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 고유의 경제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꼽혔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성장동력연구실장은 3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2020 강원경제 대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강원도의 제조업 비중은 9.3%여서 전국 평균(30.3%)보다 훨씬 낮고, 1985년 강원도 수준(13.6%)보다도 낮아졌다”며 “실물생산, 고용창출 등 경제활동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것은 강

제조업 비중 전국 3분의 1
건설·서비스업 월등히 높아
자생력 약한 경제구조 지적
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시급

원도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의 건설업 비중은 9.7%로 전국 평균(6%)보다 높고, 공공행정·국방 등 공공서비스 비중도 24.5%로 전국 평균(7.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국가경기 의존성이 높고 자생력이 약한 지역경제 구조’라고 분석했다.

접경지 경제가 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라 흔들리는 것과 같은 위기를 피할수하지 않기 위해 이날 거론된

대안은 ‘지역경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었다. 위기 대응을 위해 ‘자기 분석’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제조업, 부동산업, 유통업 등 각 분야별 경제상황을 연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시급하다”며 “경제기관들의 강원지역본부가 발족하는 경제통계 외에도 지역 고유의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원연구원은 도와 함께 강원도관 ‘그린북(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 동향 자체 통계를 개발해 저성장 시대 지역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호축’ 발전계획,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국무회의서 계획안 심의·의결

강호축 개념도

도 스마트헬스케어 중심 육성

제천~삼척 고속도로 구축 탄력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국토·공간 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강원~충청~호남)축’ 발전계획이 반영,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도 광역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강호축 핵심 교통망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개통(2026년)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며 강호축 연계 도내 교통망인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등도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강호축 발전계획 등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강호축 연계·협력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합형 항목으로 반영됐다.

강호축 발전계획의 제5차 국토종합



계획 반영은 강원도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세종, 대전, 충남 등 8개 시·도 단체장이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및 유라시아 교통물류 기반 조성, 교통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강호축 국토종합계획 확정애 수년간 힘을 모아온 결과다. 강호축 개발과 관련, 강원도는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을 중심으로 강호축 지자체와의 연계교통망과

신산업 육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단지 조성, 스마트 빌리지 구축, 평화 크루즈 항로 개설, 양양 국제공항 경제권 육성 및 국가 환승 터미널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강호축이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국가 의제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정부 중심 기존 개발정책이 강호축으로 이동,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연계, 강호축 8개 지자체는 각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거점 SOC 구축을 통해 상호 발전 로드맵 실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특히 강호축 연계 교통망이 동해북부선(강릉~제천·104.6km)까지 연결되면 강호축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대륙철도망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와 번영 시대에 강호축 발전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와 6개 연구원은 오는 10일 전남 목포에서 ‘제2차 강호축 발전 포럼’을 공동 주최한다. 박지은

여당 대표,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건설협회 방문 간담회

“연내 지역의무공동도급案 마련”

(예타 면제 사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여당인 민주당이 건설업계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오른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안윤수기자 ays77@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가 만나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 대표가 건설 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업계의 7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인 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가 참여하는 정식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3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 간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업계 대표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외 전국 각 지역의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설협회 시·도회장이

당정협의회에 업계도 참여 검토
이해찬 대표 “韓 경제에 역할 큰
건설에 예산-제도적 지원” 약속
조정식 정책위의장 “SOC 예산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

참석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대표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인데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건설업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건설은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

작으로 SOC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안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존 당정 협의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SOC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2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SOC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3년에 걸쳐 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선도 건설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지역별로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 589건을 선정했고,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367조원 규모”라며 “사업비용의 40%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이들 사업을 내년부터 20년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실질경제성장률이 0.17% 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지희기자jh606@▶4면에 계속

오늘 ‘2019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 열립니다

오후 4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13·14·15·16·17면

【 2019.12.4(수) 건설경제 】

1면서 계속 = 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 “연내 지역의무공동도급안 마련”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건설투자가 경기하방압력 극복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한 정책간담회에서 업계는 정부·여당에 7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7대 건의사항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국가 대형공사 설계심의회 지역특성 반영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제도정착 지원 △건설공사 간접비 부족문제 개선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개선 △기술인 안전 관련 공사비 산정 현실화 등이다.

이 중 여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항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안이었다.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됐고, 제2혁신도시 등 대

규모 SOC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10년간 지역의무공동도급 40%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의 뜻을 표한 이후, 연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업계에서는 대규모 SOC 예산 사업들이 중앙과 수도권 대형기업에만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이 공동발전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주현 건협 회장은 “여당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건설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며 “건설도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기자